뉴스1

[특별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 '비용'이 아닌 국가의 '필수투자'

2026.11.19 오후 03:05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공)

자살은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의 붕괴에서 비롯된 구조적 재난이다. 위기의 순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이미 위기가 닥친 후 사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해 국가의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생명 보호의 최우선 책무다.

지금까지의 자살 예방은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 선 위기자는 도움을 요청할 기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위기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러한 국가 자살 예방 체계의 중심에서 중앙과 지역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자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평가한다.

또한 전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자살 유족 지원과 언론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한 생명 사랑 위기대응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여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이어지도록 연결하고 있다.

정부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취지에 발맞춰 최근 재단 내에 '역량강화지원부'와 '긴급대응체계지원팀'을 신설한 것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다. 자살 예방의 최일선은 지역 현장이다.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복지 자원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위기자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전문인력의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2025년 586억 8500만 원, 2026년 735억 7600만 원에서 2027년 946억 7900만 원(정부안)으로 증가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제6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및 신설 사업(국가대응실 신설, 지자체 포상금 및 특교세 등) 내용이 반영돼 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자살 유해 정보 자살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및 자살 유해 정보 모니터링, 응급실, 자살 유족 등의 사업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목숨 살리는 정부'를 위해 총력 대응하여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정책이 광범위해지고 촘촘해진다는 것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생명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재단이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책 허브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투자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sssunhue@news1.kr

https://www.news1.kr/bio/general/6359662